



도로 파손 주범 '과적 차량' 특별단속·캠페인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과적 근원지역,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차량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 전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 “정성 치안구현”...범죄분석 결과 토대 기동순찰대 운영

전남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범죄분석 결과를 활용해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치안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개편된 범죄 예방대응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전남 22개 일선 경찰서장, 자율방범연합회장, 모범운전자회장 등 협력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남경찰은 시·군·자치구·읍면동별 범죄 예방에 대한 치안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매달 정책 효과와 성과를 평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역 축제가 많은 4~5월 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관을 축제장을 비롯한 다중 밀집 장소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은 마을담당 경찰관

활동을 강화해 취약지를 발굴·개선하는 등 선제적 경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2월 97명·12개 팀 규모로 신설된 전남청 기동순찰대는 기초질서 위반 및 풍속업소 단속, 수사,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발대 이후 지금까지 약 한달 간 수배자 48명, 음주운전 등 주요 형사범 6명 검거, 기초질서 위반행위 321건 단속 등 성과를 거뒀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전남 내 범죄분석으로 경찰력이 필요한 장소를 파악해 기동대와 지역경찰의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율방범대 등 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역민의 체감 치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 광주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상담

####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균형발전·전문성 강화 기대

광주시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2일부터 사흘간 추진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한다.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자치구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체계'를 구성해 수립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별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상위계획과 연계해 세부과제로 선정 ▲선정된 세부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를 비롯한 민관협력의 정도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실현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예산집행사항 점검 등 광주시의 시행계획과 연계한 자치구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를 들었고 있다.

상담(컨설팅) 대상자는 자치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보장계획 담당자이며, 상담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는 5개 자치구가 함께 공유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구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 전남도 '행복여행' 지원 확대

#### 이달부터 저소득 장애인·한부모가정 대상 시군서 접수

전남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도민을 대상으로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인원은 여행사를 통해 당일 또는 1박2일로 전남지역 여행을 할 수 있다. 2022년부터 모두 6000여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

도는 올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군과 협력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0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인당 지원액을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동행 1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참여 인원으로 지난해 1000여 명에서 올해 2000여 명으로 확대했다.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거나 무장애 관광상품을 실제 운영하는 여행사를 우대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도 개선했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 사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지체·시각·발달·청각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이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당일 여행상품 기준 1인당 16만 원 한도에서 지원, 장애인의 경우 가족, 지인, 활동보조인 등 동행인까지 경비를 지원한다.

신안, 완도, 진도 등 도서지역은 양질의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박2일 숙박여행 상품도 운영한다.

여행사 모집을 거쳐 4월부터 각 시·군 누리집에 공고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여행사별 여행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여러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도민에게 무료로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사업”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호 기자

# 대학병원 '외래' 최소화...동네의원도 단축진료

## “피로 누적...환자 위험 노출 줄여야”

##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휴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이어 1일부터 외래 진료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개원의도 이날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나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한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날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

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스프레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잘못했으니 반항해 투쟁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걸 줄이고자 선택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 위원회도 이날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 오프(휴무)에 들어간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4차 총회를 열고 “1일부터 남아있는 교수 인력

소진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 등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주당 60~98시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번아웃으로 환자 진료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워왔지만 병원 진료 전반의 업무를 떠안아야 해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우려가 높아져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라도 대학병원별로 외래 진료와 수술 조정이 불가피하다.

비대위는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 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면서 “상급병원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하고, 상급병원에 외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개원의들도 이날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갖고 “개원의들도 4월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주 40시간 정도 진료를 하는 방향”이라면서 “비대위에서 각 의료기관에 강제할 순 없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차원의 야간·주말 진료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원가에서 자발적으로 야간·주말진료를 점차 축소해 나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뉴스

### 광주시교육청, 경호 지원 등 교권 보호 보장 확대·강화

#### 학교안전공제회와 강화된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 체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와 강화된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됐지만, 이달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사고 당 200만 원 한도의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재산상 피해 비용은 사고 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이 밖에 위험이 있는 경우 최대 20일까지 경호를 지원한다. /조선주 기자

분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지원하는 등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구축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주 기자

### 광산구, 4월 한 달간 장애 인식개선 행사

광산구가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간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와 공감 확산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1800명 광산구 전 공직자가 장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교육을 추진한다. 공직자가 장애를 체험하는 현장 교육과 함께 18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시각장애인 경영인 김갑주 주식회사 어둠속의빛 대표를 초청해 ‘어둠속의 빛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16일에는 구청 광장에서 광산구 장애인생산물 홍보인사,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11개소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주민에게 홍보한다.

18일에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가족운동회’를, 4월 30일에는 광산구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제18회 광산구장애인한마음대회가 열린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7일 청각장애인 청년 일자리인 ‘카페 홀더 광산구청점’의 일일 명예 점장으로 나설 예정이다.

### 동구-몽골 울란바토르市 축제 교류 협력 다져

#### 광주 총장축제-몽골 나담 축제, 문화예술공연단 교류



동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 지난 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市 나담축제 사절단과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와 '몽골 나담 축제' 간 상호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인력 구청장과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도문화 예술부장 텐드 아우-쉬(ENKHTAIVAN TSEND-AYUSHI)

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기관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두 기관은 양 도시 간 축제 운영 등 공명 관심사에 대한 정책 정보·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와 '몽골 나담 축제' 기간에 맞춰 상호 문화예술공연단을 교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구가 '광주 문화예술공연단'을 파견하게 될 '몽골 나담 축제'는 오는 8월 16~17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

리며, '나담(Nadam)'은 몽골어로 '놀이·경기'를 의미한다. 축제의 정식 명칭은 '남자들의 3가지 경기'라는 뜻의 '에림 고르봉 나담'으로 몽골 씨름·말타기·활쏘기 등 3가지 전통 경기가 중심을 이루며 몽골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나담축제에 참가하는 '광주문화예술공연단'은 광주미디어아트와 전통민속예술을 결합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동구의 문화 인프라와 노하우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력 동구청장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의 국제교류를 통해 광주 동구의 위상을 알리고 양 축제 가 글로벌 축제로 동반 성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단발적인 교류를 넘어 양 기관이 실제적이고 중장기적인 우호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 북구,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서포터즈 5만 명' 구성

북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광주 북구 사랑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 북구 사랑 서포터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주민이 중심이 되어 북구에 대한 애郷심을 키우고 기부 문화를 확산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북구에 대한 성원과 관심을 대대적으로 확산하고자 총 5만 명 모집을 목표로 추진되며 북구를 사랑하고 북구 발전을 지지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역할은 각종 기관·단체·협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등 북구의 다양한 구정 소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리기와 북구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아이디어 제안, 북구 지역 관계 인구 1촌 맺기 운동 전개 등이다.

북구는 서포터즈에 가입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구정 참여 주민 대상 포인트 부여 및 1만 점 이상 적립 시 해당 점수와 상당한 상품권 지급 제도) 1000점을 우선 부여하고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활동 우수자 포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해 동기와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광주교육청 '복합시설사업' 2개 학교 선정...28억원 확보

#### 신가2중학교 청소년문화센터·일곡중학교 희망이음터사업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올해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2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학교시설과 함께 복합적으로 설치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93억원 중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가칭 신가2중학교 내 청소년문화센터와 체육관 사업 ▲일곡중학교 희망이음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 '눈높이 교통안전 정책' 광주경찰 대시민 설문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순해보험협회 서부본부와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 간 시민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 교통사고 예방과 체감안전도 향상을 꾀하는 '눈높이 설문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기존의 경찰 중심 교통안전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 교통사고 예방과 체감안전도 향상을 꾀하는 '눈높이 설문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경찰서 누리집, 각

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주경찰 공식 계정에서 QR코드 또는 URL로 접속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경찰서 민원실 등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교통안전(체감 안전), 교통문화(운전 행태), 교통환경(시설)에 대한 의견 총 15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김도기 기자